

“출산장려 위한 소득세법 개정을”

전국 시도의회회장협, 임시회에서 “자녀 기본공제금액 늘려야”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법률 조기 제정 등도 촉구

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이 출산장려 등을 위해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자녀 기본공제금액을 늘려야 한다고 건의했다.

은 18일 충북 청주 그랜드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회장협의회 2019년도 제6차 임시회'에서 출산장려를 위해 소득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득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은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자녀 1인당 기본공제액 150만원을 불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상향 조정하고, 기본공제에 포함하는 직계비속 연령도 자녀가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시기가 늦춰지는

현실에 맞춰 올려야 한다는 내용이다. 전국시도의회회장협의회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양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우리나라 2018년 합계 출산율이 0.97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라면서, “출산장려를 위해 전반적인 세제개편이 필요한데, 그중에서도 소득세법의 부양가족 공제와 관련한 기본공제액 증액과 자녀의 연령조건을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른 자녀 기본공제금액 150만원은 지난 2008년 중산층 및 서민층 세부담 경감을 위해 100만원에서 상향된 것이며, 부양자녀 연령은 고등학교 졸업연령을 고려한 20세 이하다.

전국시도의회회장협의회는 농촌 일손부족 해결을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내용 등이 담긴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에 관한 법률안’ 조기 제정도 촉구했다.

이와함께 지방 이전 기관 자녀들에 중학교 소재지에 관계없이 고교입학 특례를 부여하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과 시멘트 생산지역 주민들의 피해보상을 위한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을 촉구했으며, 지역 체육인의 인권보장과 체육환경 개선을 위한 ‘체육인 복지법 제정’ 등도 건의했다.

/김진성 기자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은 18일 충북 청주 그랜드플라자호텔에서 '전국시도의회회장협의회 2019년도 제6차 임시회'를 열었다. 참석한 의장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교육문화회관 이용만족도 향상해야”

도의회 교육위, 업무보고 청취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최영규)는 18일 도내 6곳 교육문화회관 소관 2019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김종식(군산2) 의원은 “도서관 운영의 내실화로 함께 어우러지고 소통하는 교육공간을 조성하고 학생과 지역 주민의 독서관심 유도를 위한 독서문화프로그램을 발굴·운영하라”고 주문했다.

또, 그는 “다양한 예체능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생들의 특기 적성이 신장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희수(전주6) 의원은 “학생과 지역 주민에게 편리한 교육문화회관별 환경을 제공하도록 방안을 마련하라”면서 “양질의 정보서비스와 이용만족도 향상을 위해 끊임없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훈열(부안) 의원은 “지역문화탐방과 관련해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바탕으로 일한 현장 탐방이 되도록 애써달라”면서 “또한, 해설 강사 위촉을 통해 지역의 정보를 깊이 있게 제공하라”고 말했다.

박희지(비례대표) 의원은 “소외계층의 문화향유와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면서 “특히,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다양한 의견 등을 수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교육문화회관에서 다구나 영화제작 관련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구성·개발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계획을 추진토록 하라”고 요구했다.

진형석(비례대표) 의원은 “지역 평생교육기관과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발굴하라”면서 “수강생과 이용자의 성취감 향상과 나눔의 기회가 제공되도록 내실화를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명지(전주8) 의원은 “교육문화회관의 특색에 맞게 도서 자료의 적시성 확보와 계층별 다양한 자료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의견수렴 등의 모니터링을 진행하라”고 주문했다.

최영규 위원장은 “문화회관별 예산 편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해달라”면서 “자유학기제와 관련해 시설확보가 중요하다. 하지만, 시설확보가 어렵다면 다른 방안을 찾아 자라나는 우리 도내 아이들에게 자유학기제 기조에 맞는 문화를 조성·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도내 시·군 발주 건설공사 신기술 활용

이정린 도의원,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 조례안' 발의

전북도의회 이정린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1)이 전라북도 및 시·군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건설신기술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정린 의원은 “본 조례 제정을 통해서 공공건설공사에 서민이라도 건설신기술 활용을 장려함으로써 도내 공공건설공사의 품질 향상 및 예산절감, 일자리창출 등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도내 건설업체의 기술개발을 촉진하여 지역건설산업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빈집 정비사업 추진 근거 마련

이항기 도의원 발의 조례안 도의회 상임위 통과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에서 이항기 의원이 발의한 '전라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가 18일 통과됨에 따라 도시 및 농어촌의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체계적인 사업실행이 가능하게 되었다.



본 조례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에 따라 기존 '농어촌 정비법', '건축법'에 관련 규정은 있었으나 실행력이 없었던 빈집정비사업의 구체적인 추진방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일원화해 노후 불량 소규모 주택

정비를 위해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크게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항으로, 빈집 철거명령 시기는 빈집정비계획을 고시한 날로부터 6개월로 하고,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시행기준을 단독주택 18호 미만, 다세대주택 36세대 미만으로 정하고 있으며,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가능한 건축물의 층수를 15층 이하로 정하고 있는 등 사업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 도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김진성 기자



정의당 전북도당 제5기 출범 기자회견이 18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실시된 가운데 정의당 전북도당 관계자들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노회찬 정신 이어 힘있는 전북 제1야당 목표”

정의당 전북도당, 제5기 집행부 구성 “도민 위한 당 될 것”

제5기 집행부를 구성한 정의당 전북도당이 “진보정치를 통한 힘 있는 전북 제1야당”을 목표로 내세웠다.

염경석 전북도당위원장을 비롯한 제5기 당선자 10여명은 18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회찬 정신을 이어받아 실효성 있는 진보정치로 전북 제1야당으로 내달리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전북도당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12.88%의 지지율로 전북

지역 제1야당으로 정의당을 키워주셨다”며 “내년 총선에서 전북지역 최초의 진보정당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과 함께 정당득표율 20%를 뛰어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염경석 도당위원장은 “전주상산고 재지정과 종합경기장 개발을 막아내고 군산지역 산업을 되살리는 등 전북도민을 위한 당이 될 것”을 약속하고 “전북 정치판의 새로운 변화와 혁신으로 보답할 것”을 다짐했다.

/김진성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

